

95.10.

적자 줄이며 교육·복지 중점증액

군인·공무원 처우배려...전력증강비 7.4%깁충 냉전의식 여전

□ '96예산안 해설

이봉수 기자

국세징수액 64조5천억원에 세출 63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팽창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예년의 틀을 바껴보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면서도 돈을 쓸 곳에는 과감히 돈주머니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드러난다. 계획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4년 2조3천억원에서 올해 1조1천억원으로 준 데 이어 내년에는 7천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성 높이거나 경기대체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는 올해말을 정점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랜 활황에 따른 초과수요 압력이 내년 봄 충선을 겪으면서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마음먹고' 돈을 투입하는 분야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이다. 재경원은 98년까지 62조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에 17조5천9백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에는 이보다도 9백1억원이 많은 17조6천8백51억원이 들어가 있다. 교육 관련 예산총액은 올 예산보다 모두 24.6% 증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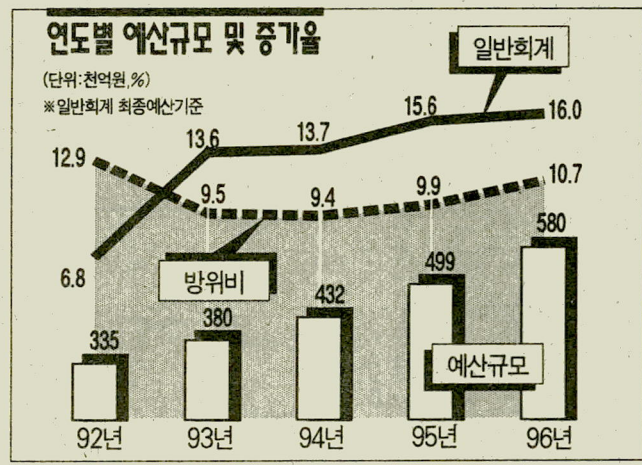
사업비 가운데 증가율이 특히 높은 분야는 국민생활 안전확보(48.6%), 정보화 촉진(39.1

%), 지역균형개발(34.0%), 중소기업 지원(29.7%) 등이다.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방위비는 증가율이 10.7%로 전체 예산증가율 14.9%를 밑돌지만, 4년 만에 다시 두 자리수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사관 등 군인에 대한 처우수준을 올리다 보니 방위비 예산 증가율이 두자리수에 이르게 됐다는 게 예산실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위비의 내역을 파고들면 처우개선 못지 않게 전력증강을 위한 울곡사업에도 훨씬 많은 예산이 배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건비 건물유지비 시설비 등 운영유지비 증가율은 내년이 11.8%, 93년 11.8%, 94년 11.7%, 95년 11.5%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면 전력증강비 증가율은 93년 5.3%, 94년 4.2%, 95년 6.2%에서 내년 7.4%로 경충 된다. 전력증강비는 그동안 방위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묶어두는 데 기여하다가 이번에는 한자리를 깨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이다.



방위비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나 되기 때문에 10.7% 증가가 1조2천2백90억원 증액을 뜻한다. 이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함께 경직성 경비 증가를 주도함으로써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그동안 예산당국은 방위비 예산을 깎지는 못했으나 한자리수 증가율로 묶는 것에서나마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취해왔다. 한자리수 방어벽은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결국 "한자리수에 구애받지 말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무너지고 말았다. 동서간의 긴장완화에 따른 혜택을 우리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21.2%로 높아지게 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

◇ 96년 국세예산안

항 목	예산(억원)	증감률(%)
·일반회계 국세	560,978	16.6
-내국세	462,449	12.7
-교통세	47,704	34.2
-관 세	50,495	45.8
-방위세	330	△0.3
·특별회계 국세	84,112	34.0
-양여금 관련세	68,212	44.1
-농어촌 특별세	15,900	3.0
총 국 세	645,090	18.6

◇ 96년 세출예산안

항 목	예산(억원)	증감률(%)
·일반회계	580,031	16.0
-교부금	120,954	16.1
-인건비	78,852	11.4
-방위비	127,360	10.7
-예비비	8,139	18.6
-일반사업비	244,726	20.6
·재정투자자 특별회계	50,005	3.4
총 세 출	630,036	14.9

* 증감률은 95년 예산대비

이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쓰인다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많이 거두어 사회복지 분야 등에 많이 쓰는 것이 선진국형 예산구조라 할 수 있다. 방위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